

“고교생·청년들에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광주형 일자리’ 성공 토론회

숙련 기능·기술인력 양성 절실
일자리 지원 청년들 머물게 해야
광주시는 계획·예산 지원
시교육청은 도제교육 성공 추진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고교생 등 청년들에게 광주형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선 ‘숙련된 기능·기술인력 양성’이 절실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는 악순환 구조를 ‘지역 청년 광주형일자리 관련 기업 취업’을 통해 선순환구조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 및 재현성, 교원 연수 등 학교 지원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동승 광주전자공고 교사는 토론회에서 “자동차산업은 기계·전기·전자가 융합된 최첨단 고급기술이 적용되는 4차산업 핵심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근무할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도제교육 기반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광주시와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발제문에서 “자동차공장 직접 고용 1000명과 연관 업체 고용인력 1만2000명 가운데 관리직과 연구개발직을 제외한 80% 인력은 현장 기능인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선 광주시와 교육청, 학교가 힘을 합쳐 희생과 봉사, 배려의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과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숙련된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사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시는 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시교육청은 맞춤형 도제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광주 학생들이 맞춤형 도제교육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또는 협력업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 교사는 주장했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은 15위(2357만원)로 1위인 울산시(6441만원)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하남·평동공단 근로자를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재배치하자는 음

직임이 일고 있다”고 우려한 뒤 “광주형일 자리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신규인력 채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규환 광주자동차설비 교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도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계속성 있는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장은 “광주형일자리가 제시하고 있는 3500만원 수준의 적정임금을 수용하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광주형일자리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 산업체는 우수 인력충원 걱정 없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므로써 지역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연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박 실장은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로 인력 채용 규모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사업과 연계한 방식을 우선 검토하자”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도제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광주형 일자리 박광태 대표 선임 문제점 따진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대표이사 선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광주시의회도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합작법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박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고,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장 재임 시절 독단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박 시장 주변의 ‘과거 인물’들이 대거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당당히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 고령의 나이도 문제도 지적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도 또다시 보조금을 투입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의 한 축인 노동

계와 노동이사제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을 두고 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대표이사, 이사진 선정 등을 두고 시의회와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생애 첫 펀드 ‘필승코리아’ 투자
국일 의지 부각 국민 참여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투자 펀드에 5000만원을 맡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취지의 금융 상품에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국일(克日) 의지를 부각해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직접 찾아 장구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문 대통령의 투자액은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약 20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1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원금손실 위험부담이 있는 주식형 펀드에 넣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파격 투자’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엿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 이번이 생애 첫 금융기관 펀드 상품 가입이다. 문 대통령은 가입 과정에서 “주식·펀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직원의 질문이 나오자 “일절 없었습니다. 주식·펀드 다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예금·적금은 해보셨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말했다. 문 대

통령은 또 “제가 농협의 오래된 고객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를 들은 한 직원이 “감사하다. 저희 농협은 민족자본 100%로 구성된 은행”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자부심을 가진 모습이 좋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가입 후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대훈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 아닌,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위험 부담도 없지 않다”면서도 “판매 보수, 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주 착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 넘어

긍정평가 46.2%로 4.1%p 차
리얼미터 조사...조국 논란에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결과 26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찬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못함 36.5%, 잘못하는 편 13.9%)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2%포인트 높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 확산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나올 연속 내렸다”고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다음날인 23일에는 소폭 반등해 회복세로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평가 34.1%·부정평가 60.3%), 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35.8%·부정평가 62.2%),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39.7%·부정평가 59.1%), 서울(긍정평가 44.8%·부정평가 51.4%) 순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가 67.2%로 부정평가가 28.8%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3%P 내린 38.3%, 자유한국당은 0.8%P 오른 30.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2%P 내려 6.7%, 바른미래당은 0.9%P 오른 5.9%, 우리공화당은 0.3%P 오른 2.1%, 민주평화당은 0.5%P 오른 2.0%였다.

/연합뉴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